

| 사회적 대화 현장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다시 무산

정기대대서도 결국 결론 못내

이동희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명환)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월 28일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정기대대)에서 장시간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음에도 경사노위 참여 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는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의 희생자기금 전환 사용의 건 ▲정부위원회 회의비 등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의 건 ▲결의문 채택 건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안건은 단연 2019년 사업계획 중 하나인 ‘경사노위 참여 건’이었다.

정기대대가 열리기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 이후 하지 못했던 사회대개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왔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주도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정기대대에는 경사노위 참여 건을 두고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 1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내용으로 하고, 수정안 2안은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 등 4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불참안이다. 수정안 3안은 조건부 참여안으로 지속가능한 노정교섭·산별교섭(공공 대정부교섭 포함)의 틀로 경사노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여 국회 강행 처리 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 토론 결과 3개의 수정안은 찬반토론 및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역시, 김명환 위원장이 “수정안 논의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 건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정기대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지만,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새로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노총은 극적인 상황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결정에 흔들림 없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